

주간 통일정세

2015-41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해 ‘우리 존엄’ 건드려”(10/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현행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북 체제가 정상인듯이 서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또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동족대결의식을 주입시키려고 발광하는 보수패당의 망동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적대와 대결만을 추구하는 반통일적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 담화는 이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과쑈독재와 친미친일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전대미문의 역사 쿠데타”라는 주장도 펼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미 항공모함 띄워놓고 이산상봉 하려는가”(10/1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모처럼 마주앉아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있을 그 시각에 화약대를 풍기며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초보적인 인륜도덕을 무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지적함.
 - 통일신보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모처럼 마주앉아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있을 그 시각에 화약대를 풍기며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초보적인 인륜도덕을 무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지적함.
 - 통일신보는 “침략을 예고하는 대규모 전쟁 장비들이 집결하고 대화 상대방을 위협하는 핵전쟁 연습들이 연일 벌어지는 상황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불신과 대결의 골만 깊어진다는 것은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라고 주장함.
 - 또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어렵게 마련

된 완화와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대결적인 전쟁 행위들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북한 보험사 “남북 경제 확대되면 보험종류 더 늘린다”(10/14, 연합뉴스)
 -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4일 홈페이지에 “북남 사이에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 사업을 보험이라는 경제적 공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2005년부터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오는 남측 기업가들의 재산에 대한 보험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고 연합뉴스는 인용하여 보도함.
 - 이 회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험 업종은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이라며 “앞으로 북남 사이에 경제협력사업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데 맞게 여러 가지 보험 업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최근 북한에서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클럽, 평양 순안 공항 신청사 등 새로운 건물이 많이 건설됨에 따라 화재보험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고 뉴스는 인용하여 보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노동단체, 28~31일 평양 노동자축구대회 개최 합의(10/12, 연합뉴스)
 - 남측 양대 노총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 참여하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대회’가 오는 28~31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남북 노동단체는 12일 2차 실무협에서 대회 날짜 등 세부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정해졌으며 정부 당국자는 “양대 노총이 제출하는 남북 공동행사 내용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순수 체육행사로 진행된다면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 황강댐 7일부터 방류 확인…뉘시객 대피(10/14,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앞둔 지난 7일부터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없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7일 이전까지 평상시 유입량은 초당 12t이었지만 7일 31t에 이어 8일 61t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14일 현재 49t이 유입되고 있다고 뉴스는 연천군과 한국 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 등의 말을 인용하여 뉴스는 전함.

- **“화해와 통일의 물꼬 되길”…남북 불교계 금강산서 합동법회(10/15, 연합뉴스)**
 - 대한불교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닮아 앞둔 15일 오전 신계사 대웅보전 앞에서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15일 법회에는 지난 3월 중국에서 만나 남북 공동행사를 협의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강수린)을 포함해 남북 불자 105명(남측 65명, 북측 40명)이 참석했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 역사인식 하나로”…개성서 만월대 공동발굴 토론회(10/15, 연합뉴스)**
 - 문화재청과 통일부,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15일 개성 고려박물관에서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개성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참가자들은 2007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진행돼 온 만월대 궁궐터 공동발굴 조사의 전개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뉴스는 전함.
 - 15일 학술토론회는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됐으며, 이어서는 만월대 유물 전시장 개관 기념식이 열렸다고 뉴스는 전함.

- **이산가족상봉 일정·명단 확정…작별상봉 1시간 늘어(10/16, 연합뉴스)**
 - 통일부는 오는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일정과 명단이 최종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20~22일 진행되는 1회차에는 북측 방문단 96가족이 남측 가족과 상봉하고, 24~26일 2회차에는 남측 방문단 90가족이 북측 가족과 만난다고 뉴스는 전함.
- 단체상봉~환영만찬~개별상봉~공동중식~단체상봉~작별상봉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며 각 순서는 모두 2시간으로 총 12시간이며 특히 작별상봉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봉 횟수·시간을 늘리자고 요청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마지막 작별상봉 시간이라도 늘리자는 우리 요청을 북측이 받아들여 그동안의 1시간에서 이번에 2시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하여 보도함.

-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에 대해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을 거부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부정하고 여전히 체제대결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10.12, 중앙통신·민주조선)
-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및 국회의 ‘북한 인권법’ 논의 및 ‘작계 5015’ 수립·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등 거론하며 ‘反北 동족대결소동’이라고 비난(10.13, 평양방송)
- 「작계 5015」 등 관련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北)를 무력으로 침략하려고 미쳐날뛰는 남 당국자들의 대화 부정적이며 反평화적인 정체를 명백히 폭로해주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대결광산자들의 농락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10.14,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로켓발사 계획에 대한 일본의 ‘위협’ 주장들 관련 ‘공화국을 위협국가로 선전함으로써 저들의 아시아지배야망에 대한 세계의 부정적 인식을 뒤바꾸어놓자는 속심’이라고 비난하며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청산이나 조속히 하라’고 주장(10.14, 중앙통신)
- ‘남조선 당국자들이 운운하는 통일은 저들의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 한반도에 부식시킬 것을 노린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라며 ‘체제통일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비난(10.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군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및 특수부대편성 추진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 및 ‘한반도문제 해결 위한 평화보장체계 구축’ 주장(10.16, 중앙통신·민주조선)
- 박 대통령의 對北발언(北 비핵화의 시급성, 北 인권상황 개선 등) 관련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 야망의 발로, 대화상대방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북남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10.17,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한·독 정상회담에서의 발언(독일 통일과정, 북핵포기, 지지와 공조)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적 도발’이라며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흡수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반공화국 국제공조와 동족대결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10.18,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미국 종교자유보고서 비난…“강경 대응해나갈 것”(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미국이 또다시 벌여놓은 보고서 발표 놀음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고 우리 수뇌부의 존엄과 권위를 헐뜯어보려는 미국의 적대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 세계 도처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제도 전복, 내부 와해 책동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 떠드는 것이야말로 위선의 극치”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은 극악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한사코 고집하며 온갖 구실을 다 꾸며내어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의 제도 전복을 노린 인권 소동에 계속 매어달리고 있는 미국의 책동에 끝까지 강경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에 반발…“초강경대응”(10/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조종하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다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획책하면서 초안 작성을 위한 협상 놀음을 벌리고 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유엔 무대에서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비열한 모략 책동”이라며 “적대 세력의 무분별한 인권 대결 광기를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눌러 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 대변인은 또 “우리는 최근 EU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EU는 합의된 전권대표 방문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거짓말투성이 보고서를 들고다니며 결의안 채택 놀음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조선신보, 미국 향해 “변해야 할 것은 너희들”(10/1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3일 ‘변함없는 조선(북한)의 노선, 적대국을 향한 단호한 경고’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최근 열린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행사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겼다고 주장함.
 - 신보는 “당 창건 70돌 행사를 통해 과시된 일심단결의 위력과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방위력에 의거하여 자기의 힘과 기술, 국내 자원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간다는 것이 조선의 배짱”이라고 강조함.
 - 이어 “조선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거부감에 사로잡혀 그것을 압살하려고 날뛰는 적대국(미국)을 향해 조선은 ‘너희들이야말로 변해야 한다’는 단호한 경고도 던졌다”고 언급함.

- 북한 “8월 교전 직전 핵억제력으로 평온 얻었다”(10/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불패의 힘’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오늘날 핵억제력에 기초한 자위적 국방력에 의해 우리의 최후 승리는 더욱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이라고 덧붙임.
 - 신문은 또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따른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 직전에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 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군력이 있었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고 선전하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은 우리의 경제강국 건설과 군력 강화에서 새로운 질적 비약을 이룩하게 한 승리의 도약대였다”고 자평함.

다. 회담 관련

- 북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 협조 관련 회담록 조인(10/1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담록이 14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함.

-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회담록에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전날 리 대외경제상과 갈루슈카 장관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열고 경제무역협력 발전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회담을 통해 양국이 중국을 중개국으로 한 간접 교역을 최소화하고 직교역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러시아 대표단은 ‘북러 친선의 해’ 폐막식 참석 차 지난 12일 방북했으며 폐막식은 13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폐막식에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 박명국 외무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안드레이 클리모프 총이사회 상무위원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제우주연맹 가입 승인받아(10/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의 국제우주연

맹가입이 12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우주연맹 제66차 총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美 해군 제3함대와 제7함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계획 관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엄청난 무력증강 책동을 각성 있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10.12, 중앙통신)
-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의 ‘국경없는 의사회’ 병원 오폭 및 피해사실을 전하며 ‘세계도처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살사건 발생은 미국이 인권유린 왕초라는 증거’라며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역설(10.13,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러 외교관계 설정(‘48.10.12)’ 67주년 관련 지난 기간 ‘兩國 정치·경제·문화 등 친선협조관계 확대발전’ 과시 및 “北-러 친선관계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 강조(10.13, 중앙방송·노동신문)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헌법심의위원회 대표단(단장: 테베 하싸누딘 부위원장) 면담(10.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단장: 태형철 총장 겸 고등교육상), 10월 16일 러시아의 여러 대학 방문 위해 평양 출발(10.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정부대표단(단장: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원동발전상), 10월 16일 귀국(10.16, 중앙통신·중앙방송)
- 0北 외무성 성명(10.17)]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요구하며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조-미 사이의 원칙적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조선반도에서 보게 될 것은 무한대한 핵억제력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위협(10.17, 중앙통신)
- 北 정부경제대표단(단장: 리룡남 대외경제상), 10월 17일 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10.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중조선인총연합회축하단·대표단·후원단, 10월 17일 평양 출발(10.17, 중앙통신)
- 재캐나다조선인연합회대표단과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 10월 17일 평양 출발(10.17, 중앙통신) ‘현재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지위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몇 십 년 후에는 패권적 지위가 중국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종말은 역사의 준엄한 선고’라고 주장(10.18,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당창건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10/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기념사진 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지휘관들이 참석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대표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통신은 전함.
 - 이 자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총리 등 장·정·군 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 도당 책임비서들이 함께했다고 통신이 전함.
- 북한 김정은, 인민군 제350부대 시찰...“맛 있는 음식 쥐라”(10/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350부대를 시찰하고 군인들의 식생활 등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인들에 대한 후방사업(부식조달)을 잘하는 것은 싸움준비 완성의 중요한 비결”이라며 “지휘관들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군인들의 식탁에 올려놓기 위해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인식당과 일일창고, 콩 창고와 함께 부대 주변 산림도 둘러본 뒤 “군부대에서 자체 양묘장을 더 잘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며 애국립 조성과 보호사업에서도 선봉적 기치를 들고 나가라”고 주문했다고 통신은 전함.
 - 16일 시찰은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오금철 부총참모장이 수행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부대를 시찰한 뒤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김영남, 터키 대통령에 폭탄테러 인명피해 위로 전문(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폭탄테러로

인명 피해를 본 터키의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13일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전문에서 “나는 앙카라에서 테러 공격 사건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해 당신과 당신을 통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귀국 정부에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터키 외무장관에게 별도로 위로 전문을 전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강수린, 한달전 건강문제로 교체…과대해석 말라”(10/1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강수린(63)씨에서 리충복(61)씨로 교체한 배경에는 강씨의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인용하여 보도함.
- 지난 15일 금강산에서 열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북측은 강씨가 “건강이 나빠서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는 보도함.
-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합동법회를 봉행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측은 ‘위원장이 돌연 교체돼 이산상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남측 참석자들의 질문에 “과대해석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조불련측은 “강 전 위원장은 이미 한 달 전에 당뇨병 증세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고, 곧 수리가 됐다”면서 “교체와 남측 통보 시점에 간격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청년동맹, 내년 초 23년만에 대규모 대회(10/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57차 전원회의의 소식을 전하며 “전원회의에서는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청년동맹 창립 70돌을 맞으며 2016년 1월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 전용남 청년동맹 위원장 등이 참석한 15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9차 대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깊은 관심 속에 열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청년동맹」 중앙총재 제57차 전원회의, 10월 15일 평양에서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보고)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 및 “제9차 대회를 2016년 1월 평양에서 소집” 결정(10.16, 중앙통신)
- ‘타도제국주의동맹(ㄷ·ㄷ)’ 결성(‘26.10.17) 89주년 관련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성격과 면모에는 ㄷ·ㄷ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비껴있으며 ㄷ·ㄷ의 전통과 업적은 당의 귀중한 재보로 된다’며 ‘당의 영도 따라 ㄷ·ㄷ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선동(10.1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자위적 군사노선과 병진노선으로 무적의 국방력을 다진 것은 노동당의 특출한 공적’이라며 ‘최근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10.18,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내각 직속기업, 문어발식 확장…정부 운영자금 확보 총력(10/18, 연합뉴스)
 - 북한 내각 직속 조선대양총회사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스위스, 브라질의 권위 있는 회사들과 몰리브덴 금속광물제품 생산과 판매에서 합영, 합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대양총회사는 “함경남도 장진군에 위치한 몰리브덴광산은 연간 수백여t의

몰리브덴정광을 생산하여 몰리브덴철제련소에서 몰리브덴철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식량 부족분 67% 확보 못해”(10/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42만1천t이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확보한 식량은 14만 2천여t에 불과해 67%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함.
- “평양 시장환율 1달러=8천400원…공식환율은 1달러=106원”(10/17, 미국의소리)
 - 지난 9월 23~29일 북한의 경제상황을 알아보러 평양을 방문한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사이’(東洋經濟)의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은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함.
 - 그는 “‘보통강호텔’에서의 공정환율(공식환율)은 1달러에 106.37북한원이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1달러에 99.78원이었다”며 “‘보통강백화점’에서 본 시장환율(실질환율)은 1달러 8천400원으로, 작년엔 1달러 7천600원 정도였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물가는 과자나 생선 통조림 등은 1달러 이하로 살 수 있고 옷도 아동용은 5~10불 정도였다. 호텔에서 산 생수는 30~40원가량이었다”고 덧붙임.
 - 후쿠다 부편집장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과 평양남새연구소 등을 방문해 ‘포전 담당책임제’의 성과를 물어보니 관계자들이 ‘생산량이 30~40% 늘었다’고 답했다”고 설명함.
 - 또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관계자가 “올해 가뭄 영향으로 모내기를 두 번, 세 번 할 수밖에 없는 지방도 있었지만 모내기가 잘 된 지방은 지금 작황은 괜찮다”고 추수 전망을 이야기했다고 소개함.
 - 이 관계자는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다 국산화하며 자기 자원과 힘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무역이나 세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후쿠다 편집장은 덧붙임.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평양-벨라루스 직항노선 내년 5월 개통(10/13, NK뉴스)
 - NK뉴스는 13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과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을 왕복하는 전세기 항공노선이 내년 5월 개통된다고 보도함.
 - 뉴스는 영국의 한 여행사 말을 인용해 북한과 동유럽 사이의 장거리 항공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함.
 - 벨라루스 항공사는 이 노선에 TU-154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노선의 개설로 북한이 동유럽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대외경제상, 동남아 순방…무역 다변화 ‘총력’(10/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에 가는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정부 경제대표단이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평양시 상수도부문 회의, 10월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김수길(평양시 당 책임비서) 등 참석(10.17, 중앙방송)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새 압연선재가열로(고온 공기연소 기술로 운영, 수입 의존 대체) 건설 및 첫 제품생산(10.16, 중앙방송)
- 사리원방직공장, 새로 꾸려진 셔츠천직장에서 생산이 시작됐다고 보도(10.17, 중앙통신)
- 백두산지구 삼지연군의 벼개봉국수집, 새롭게 개건(10.18,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산케이 “北, 화교압박 강화…화교 특별대우 없애고 단속 강화”(10/12, 산케이신문)
 - 북한은 지난 5월 1일자로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를 자국 주민과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단행하는 등 화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진시에서는 화교의 무허가 송금 활동 및 한국 영화·드라마·음악의 유통 금지 지침이 통달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12일 보도함.
 - 이런 상황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중국인에게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함.

마. 사회 동향

- 북한 주민들, 명절 분위기…나들이객들로 ‘북적’(10/1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온나라 천만군민이 11일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뜻깊은 명절의 하루를 즐겁고 의의깊게 보냈다”고 12일 보도함.
 - 방송은 특히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실내물놀이장의 각의한 수조에서는 마음껏 헤엄을 치며 즐기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희열과 낭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고 방송은 선전함.
 - 북한은 “훌륭하게 개건 보수된 평양제1백화점과 광복지구상업중심, 만수교고기상점과, 보통강수산물상점,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해서 상업부문 급양부문 봉사자들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다”고 설명함.
 - 이밖에 평양과 전국 각지에서는 사진·미술·도서전람회와 우표·미술전시회가 잇달아 열렸고, 기관과 기업소들에서는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이 열려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주었다고 방송은 덧붙임.
- 북한, 당창건 기념 ‘인기 걸그룹들’ 축하공연…축제 분위기(10/12,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1만 명 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이 11일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보도함.

-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11일 공연은 독창과 합창, 무용, 관현악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공연이 끝난 뒤 하늘에서는 당 창건 70돌을 기념하는 축포가 터졌다고 통신은 전함.
 - 또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는 북한관 걸그룹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 공연이 열렸다고 통신은 전함.
 - 공연에는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쿠바, 라오스, 베트남 대표단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최룡해·최태복·김양건·곽범기·오수용·김평해 당 비서가 함께 관람했으며, 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도 자리했다고 통신은 전함.
 - 평양방송은 “무대 배경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지자 장내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 올랐다”며 연주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나왔다고 전함.
- 북한, 당창건 기념 꽃 전시회서 SLBM 모형 전시(10/1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2일 저녁 방송한 ‘어머니당 우리러 펼친 축원의 꽃바다’ 프로그램에서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회를 소개하며 북한의 첫 SLBM인 ‘북극성 1호’ 모형도 공개함.
 - 방송은 12일 북극성 1호와 함께 ‘은하 3호’와 ‘은하 9호’ 로켓의 모형도 함께 내보내면서 “우리 부대에서는 우리 당을 창건해주시고 또 백전백승의 한길로 영도하여 오신 대원수님들에 대한 경모의 정을 담아 1천여 상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전시대를 형상했다”고 함.
 - “평양 순안공항 신청사서 인터넷 사용 가능”(10/15,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7월 문을 연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방’이 마련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을 방문한 여행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터넷방에는 일정한 금액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두 대가 설치됐으며, 이곳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메일을 보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함.
 - 그러나 북한 사람 두 명이 인터넷방을 지키고 있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북한

사람은 없었다고 방송은 덧붙임.

- 북한 “청봉악단 공연 연일 성황…우아한 율동”(10/15, 조선중앙방송)
 - 북한 ‘청봉악단’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공연이 연일 성황리에 진행중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함.
 - 방송은 15일 “공연장소인 인민극장에 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군중이 차고 넘쳤다”며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외국 손님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악단은 공연에서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를 시작으로 노동당과 최고지도자를 향한 충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중창곡, 경음악, 기악 등을 불렀다. 또 ‘오 수잔나’와 러시아 처녀노래 연곡 등 외국 곡도 선보였다고 방송은 전함.
 - 지난 8월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러시아에서 첫 무대를 꾸며 주목받았던 청봉악단이 북한 관객에게 공연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11일 시작된 경축 공연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진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방송절 70주년 기념…특집프로그램 방영(10/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5일 ‘위대한 영도로 빛나는 주체방송의 70년’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방송은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방송”이라고 주장함.
 - TV는 “텔레비전 방송설비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위원장)께서는 1963년 3월 3일 아버지 수령님(김일성 주석)을 모시고 우리의 첫 텔레비전 방송을 보이주시고 주체적인 텔레비전 방송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고 전함.
 - 또 2010년 10월 10일에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을 사상 처음으로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했으며,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행사와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전승절) 60돌 기념행사 등도 생중계로 내보냄.

- “북한 방송매체, 맥 컴퓨터 OS 바탕화면 사용”(10/16, NK뉴스)
 - 우리민족끼리TV가 방송 배경으로 미국 애플사의 맥 컴퓨터 운영체제 바탕화면과 비슷한 화면을 사용해 눈길을 끈다고 NK뉴스가 16일 보도함.
 - 뉴스는 우리민족끼리TV의 유튜브 방송 목록을 찾아본 결과, 우리민족끼리TV가 지난 5월부터 애플의 맥 운영체제(Mac OS X 10.4 Tiger) 바탕화면과 비슷한 화면을 방송 배경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함.

- 그러나 우리민족끼TV가 애플로부터 공식적인 사용 허가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이며 북한이 서방 세계에서 생산된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공연 성황...“수만명 관람”(10/16, 조선중앙방송)

-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공연이 연일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함.
- 방송은 16일 “공연장을 찾아오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 외국인, 해외 동포로 공연 장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며 “첫 공연이 진행된 때부터 며칠 사이 관람자수는 수만명에 달했다”고 전함.
- 두 악단은 애국가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서 노동당과 최고지도자에 찬사를 보내고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남·녀 합창곡, 독창곡, 관현악 등을 선보였으며 지난 12일 시작된 두 악단의 공연은 16일까지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함.

- 제8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전시회 개막식, 10월 1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및 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장)·홍서현(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김승두(교육위원장/개막사) 등 참석(10.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세계 식량의 날(10.16)」 행사, 10월 16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 및 고명희(농업성 부상) 및 주북 세계식량계획 대표(달린 타이모) 등 참석(10.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공화국선수권대회(평양 5월1일경기장 등) 10여개 종목 경기 결속 및 사격경기에서 새 기록들(50m 보총 3자세사격 등) 수립(10.16, 중앙통신)
- 전국 도(都) 대항 군중체육대회-15, 평양에서 10월 22일부터 열릴 예정(10.17,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잠수함미사일 수직발사관 시험징후…발사대 상부구조물 설치(10/15, 연합뉴스)
 - 북한이 신포 남부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직발사관 시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군사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가 14일 밝혔.
 - 버뮤데즈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디지털글로벌의 상업용 인공위성이 지난달 21일 촬영한 사진에 대한 관독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으며, 또 신포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사진에 포착돼 북한이 앞으로 1~2년 내에 새로운 잠수함 건조에 나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수직발사관 시험 계획 징후와 관련, 그는 미국의 CNN 방송이 지난 9일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곧 서해안에서 SLBM 시험을 실시할 것 같다고 보도한 것에 주목함. 또 지난해 6월부터 현대화 작업에 들어갔던 선박 건조 시설과 기계공장들이 완공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버뮤데즈는 설명하였음.

- 미 전문가, 북한 5~10년 내 SLBM 개발 가능…ICBM보다 위협적(10/17, 연합뉴스)
 -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북한이 5~10년 안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미사일방어(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강연에서 이런 분석을 하였음. 그는 “북한이 이미 해결한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면, 5~10년 안에 SL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예측이 비현실적이지만은 않다.”고 언급함.
 - 이어 “북한 SLBM의 정확한 능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ICBM 개발보다는 기술적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며 SLBM이 ICBM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강조함. 그는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두 변형’ KN-08 ICBM은 실물 모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나. 미·북 관계

- 조선신보, 미국 향해 “변해야 할 것은 너희들”(10/13, 연합뉴스)
 -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북한의 핵개발 고수 입장을 전하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변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라고 일갈함. 조선신보는 이날 ‘변함없는 조선(북한)의 노선, 적대국을 향한 단호한 경고’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최근 열린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행사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겼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당 창건 70돌 행사는 미국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어떤 강자들과 맞붙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말함.
 -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이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에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과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되면 건설적인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재차 언급함.
- 미국 전문가들, 북한, 북중관계 개선 위해 도발 자제(10/14,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연설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의식한 결과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옴.
 -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현재 관련국이 모두 공조하는 상황에서 도발이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의 후과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열병식 참석에 주목하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도발을 자제했을 수 있다.”고 진단함.
- 미국무부 보고서…북한 종교자유 없고 사형·고문 자행(10/15,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힘.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함.
 - 올해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항목에 관해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거의 유사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북한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최악의 인권탄압국임을 부각시킴.

- 또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보고서에 들어갔던 ‘종교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문구가 삭제돼 종교 자유가 원천적으로 박탈돼 있음을 강조함.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동시에 종교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질서를 위해 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면서 “북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단체는 계속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 미국 종교자유보고서 비난…강경 대응해나갈 것(10/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미국 국무부가 최근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북 적대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미국이 또다시 벌여놓은 보고서 발표 놀음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고 우리 수뇌부의 존엄과 권위를 헐뜯어보려는 미국의 적대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함.
- 그러면서 “미국은 극악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한사코 고집하며 온갖 구실을 다 꾸며내어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의 제도 전복을 노린 인권 소동에 계속 매어달리고 있는 미국의 책동에 끝까지 강경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오바마, 北, 비핵화 협의 원하면 곧바로 대화 시작(10/1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의 해제와 관계 강화에 관심이 있거나 비핵화 논의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의 테이블에 바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확대 오찬 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이스트룸에서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고립의 심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힘.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며 “북한인들에 대한 정권의 끔찍한 처우를 고려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인권남용을 알리고 인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다. 중·북 관계

- 중국 일각서 ‘北열병식 조롱’…中관영매체 이례적 ‘훈계’(10/12,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놓고 중국 내 일각에서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모욕말라.’는 훈계조 사설을 게재함.
 -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사설에서 중국 인터넷에서 북한 열병식을 조롱하는 목소리와 비우호적 표현들이 일부 등장했다며 심지어 “한국, 미국, 일본 등 조선(북한)을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더욱) 거슬린다.”고 비판함. 또 “그들의 이 같은 조선에 대한 공개적 책망은 결코 본인들의 존엄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는 또한 중국의 대북 태도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환구시보는 이어 북한이 걸어온 길과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한 중국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고, 중국과 비교해 북한이 더욱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으며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것 등은 ‘사실’이라고 말했음. 특히 “중조(중국과 북한) 사이에 핵 문제를 둘러싼 엄중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 또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부 중국인이 ‘압록강 건너편(북한)’을 조소하고 모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북한, 대중수출 늘려 핵심계층 동요 막는다(10/12,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은 중국의 경기둔화에다 석탄가격 폭락으로 대중 수출이 급감, 자금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때문에 핵심계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커스 놀란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자금난 심화로 정권을 지탱해주는 핵심계층에 대한 당국의 생활 지원이 줄어들면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당국이 대중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보도함.
 - 전문가들은 한정된 자원 중 천문학적 비용(한화 1조~2조원)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쏟아 부은 데 이어 서방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해 온 ‘위성 발사’ 등 국방예산에 투입하다 보니 자금난이 한층 심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심 엘리트층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중국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함.

- 중국 핵전문가, 북한 핵무기 핵심기술 중국 것 아니다(10/13, 연합뉴스)
 - 중국의 핵군수산업과 핵발전소 건설·운용을 주도하는 중국핵공업집단(中國

核工業集團(CNNC) 소속 전문가가 북한의 핵무기 제조 핵심 기술은 중국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밝힘.

- CNNC의 주쉬웨이(諸旭輝) 박사는 13일 서울 송실대에서 열린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핵심기술이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의 많은 시설을 검토했는데 거기에서는 플로우 포밍 머신(flow forming machine) 관련 기술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함.
- 주 박사는 “중국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고 2~3개 서방 국가만 생산할 수 있었다.”며 “이주 제한적인 몇 개 국가에서 타국에 이것을 수출했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으며,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어떤 나라에서 장비를 수출했고, 북한으로 수송한 중간 단계의 국가가 어디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임.

■ 中, 北김정은 ‘똥보3세’ 호칭 검색 차단…관계회복 겨냥한 듯(10/13, 연합뉴스)

- 북한에 비판적인 중국 네티즌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판적으로 가리킬 때 ‘진싼팡즈(金三반(클 반. 月+半)子)’라고 부름. 그냥 ‘싼팡즈’ 또는 ‘싼팡’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김씨 일가의 똥보 3세’라는 뜻임.
- 13일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에서 ‘진싼팡즈’를 검색하면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만 뜨고 검색 결과가 일절 나오지 않음. 미국의 외교안보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12일(현지시간) 자사가 지난해 7월 어느 한날 바이두에서 검색했을 때는 1천570만개가 떴으나, 중국의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간 이날 검색에선 완전히 차단됐다고 전함.
- 이는 류 위원이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정부 간 관계복원 전망이 이는 가운데 나타난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당국이 대북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국내에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中전문가, 북중관계 온도상승…혈맹관계로는 못 돌아가(10/15, 연합뉴스)

-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최근 북한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북중 관계개선 기류와 관련해 양국관계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종전의 동맹관계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의 평가가 나옴.
-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위사오화(虞少華) 주임은 15일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 CIIS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8차 한중일 협력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몇 년 간 중조관계는 비교적 냉담했다. 서로 핵 문제로 견해차가 있었다.”며 “솔직히 말하면 적극적으로 (북중 관계를)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조선에서도 중국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불만이 많았다.”고 소개함. 또 “조선은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자신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며 “(양측은) 상대의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임. 그러나 “(북중 관계 복원은) 이전과는 다르다. 완전히 이전 상태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냉전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동맹(혈맹)’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잘라 언급함.

- ‘北中 해빙 첫 행사’ 단둥 북중박람회 개막…호시무역구도 개장(10/15,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최하는 유일 종합박람회인 ‘중·조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북·중 박람회)’가 15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신개발지 귀먼(國門)항 광장에서 개막하였음.
 - 4회째를 맞은 북중 박람회는 3년간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최근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교류 확대에 이어질지 가늠하는 잣대로 주목받고 있음. 18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박람회는 처음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가급 행사로 격상되었으며, 귀먼항 광장에는 북중 변경 주민들이 관세 없이 민간 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五市)무역구도 개장함.
 - 북한은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한 듯 예년과 달리 무역성, 외무성, 국제전람회, 만수대창작사, 투자협영위원회 등으로 400여 명(무역대표 300명 포함)의 확대대표단을 꾸렸고, 총 100개 기업을 참가시켰음. 중국 측도 국가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상무부, 외교부, 문화부, 여유(관광)총국 등 중앙 부처가 랴오닝성 정부와 공동으로 박람회를 주관하도록 함. 특히, 개막 첫날 박람회장 출입구 왼쪽에 ‘황금평 경제특구’ 홍보부스가 마련돼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이날 개막식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중국 측이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이 경제특구 개발계획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북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 협조 관련 회담록 조인(10/14,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이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담록에 14일 조인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담록이 14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하였음.
 - 이와 관련해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회담을 통해 양국이 중국을 중개국으로 한 간접 교역을 최소화하고 직교역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한편, 러시아 대표단은 ‘북러 친선의 해’ 폐막식 참석 차 지난 12일 방북하여 북한이 최근 새로 띄운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와 평양에 있는 러시아정교회 교회당인 정백사원도 돌아보았음.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일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5주년이 되는 올해를 북러 친선의 해로 정한 뒤 문화교류 등 행사를 개최해옴.

- 미국, 러시아, 북한 핵 개발 단호하게 반대(10/1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힘.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고 있다는 몇몇 조짐이 보이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는 (경협을 통한) 대북 관계 개선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란 핵심 목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는 특히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며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왔다.”고 강조함.
 -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동반국들과 함께 설득 또는 압박으로 저지하는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러시아, 지하자원-건설분야 합작투자 활발(10/16,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지하자원 개발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짐.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기업들이 합작 투자를 위해 북한에 잇달아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함.
 - 러시아의 지하자원 개발 전문기업인 ‘노던 마인즈’사는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합작기업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던 마인즈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질 전문가단을 북한에 보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짐.
 - 러시아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마그네슘 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북한의 ‘이연-마그네슘 클린커 협회’와 합작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세비르사는 김책제철단지 개보수 작업과 함께 연간 10만t 규모의 철강 자재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해짐.

바. 기타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제우주연맹 가입 승인받아(10/15, 연합뉴스)
 - 장거리 로켓 발사를 총괄하는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 국제우주연맹(IAF) 가입을 승인받았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의 국제우주연맹가입이 12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우주연맹 제66차 총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보도함.
 - 국제우주연맹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951년 세워진 국제기구로,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으며 현재 북한을 포함해 65개 국가의 274개 정부 및 민간조직이 가입돼 있음.
 -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기술개발과 발사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국제우주연맹 가입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시험발사하며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간주하고 있음.
-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에 반발...“초강경대응”(10/18,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의 문답에서 “미국의 조종 하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다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획책하면서 초안 작성을

- 위한 협상 높음을 벌리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이는 유엔 무대에서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모략 책동”이라며 “적대 세력의 무분별한 인권 대결 광기를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눌러 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 한편, 앞서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이 최근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민구 국방부 장관, 美 국방장관에 KF-X 기술이전 요청할 것(10/1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방미 기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4가지 핵심 기술은 미국이 한 번도 외국에 이전한 적이 없고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이전 거부 결정을 내린 상태이지만 한 장관이 이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는 KF-X 사업 핵심 기술 이전 거부 결정을 내린 부처도 미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이지만 이 같은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미국인 10명중 8명 한국관계 중요…한국방어 찬성47%로 최고치(10/14, 연합뉴스)
 -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 5월 25일 부터 6월 17일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남녀 2천34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또 66%는 한국을 믿을 만한 동맹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2%는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음. 북한이 한국을 침범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투입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47%가 찬성, 49% 반대 입장을 각각 보임.
 - 한편, 찬성 응답 47%는 1974년 인식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라고 CCGA 측은 밝히며, 이번 조사는 CCGA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차대통령,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친구이자 신뢰할 파트너(10/1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한-미 동맹은 미국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밝힘.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벨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만찬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으로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박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시작한 주요20개국(G20)과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연이어 주최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비전을 함께 구현해 나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원한 친구로서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전체 응답자의 83%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최근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양 국민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였음.

- **케리, 한미가 함께 하면 좋은 일 생겨…늘 서로의 편(10/15,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단순히 안보에 대한 지지나 물질적 이익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벨론 오디토리움에서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미 동맹은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오래된 발견에 기초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때나 그리 좋지 않을 때나 우리 양국은 늘 서로의 편이 돼 왔다. 이것은 계속할 가치가 있는 전통이며 계속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함.
 - 이밖에 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늘 푸른 동맹’의 상징하는 소나무 묘목을 선물 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윤 장관에게 버논 산의 툼립 나무를 선물하겠다고 밝힘.

- **‘올바른 역사관’ 강조한 차대통령, 워싱턴서 ‘역사 행보’(10/15, 연합뉴스)**
 -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미국으로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 계기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의미를 평가하고 재조명하는 ‘역사행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보여준 행보나 메시지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을 우회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이러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방미 역사행보가 현행 역사교과서가 주체사상과 반미정신을 담고 있으며, 미군을 점령군으로 묘사하는 등 좌편향적으로 기술돼있다는 여권 내 역사인식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옴.
- **朴대통령, 달탐사·우주개발 협력…한미동맹 뉴프론티어(10/15, 연합뉴스)**
-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 센터를 방문함.
 - 박 대통령은 “고다드 센터는 미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면서 “우주개발의 꿈을 실현시키는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이곳 방문을 뜻깊게 생각한다. 양국간 우주 협력을 한 단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우주협력을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뉴프런티어)으로 추진하는 의미로 이뤄졌다.”고 설명함.
- **미국, 정상회담 최대의제는 북한…한국이 아시아재균형의 중심(10/1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오는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에서는 북한 문제를 필두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 보좌관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14일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한미 정상회담 사전브리핑을 갖고 예상 의제 등을 설명함.
 - 그는 “(두 정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회담에 복귀시키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북한에 9·19 공동성명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루비오, 박 대통령 통일 구상에 박수…미국, 긴밀히 협력해야(10/15,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14일 (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로 표명함. 미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공식 미국 방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반도를 민주적 체제 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박 대통령의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힘.
 -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같은 고귀한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통일된 민주 한국은 모든 한국인에게 평화와 번영, 자유를 안겨다줄 것”이라고 강조함.
 - 루비오 의원은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향해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민주적 가치의 수호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가족들 간의 유대와 교역, 그리고 함께 희생했던 역사로 연결돼있다.”고 평가함.
- 차대통령, 한국, TPP가입하면 한미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10/16, 연합뉴스)
 -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FTA 등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혁신·창업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3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노동·금융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암참 (AMCHAM) 등을 통해 미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FTA이행·기후변화 논의(10/16, 연합뉴스)
 - 백악관은 오는 16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북한의 도발 위협,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어니스트 대변인은 우선 경제분야에서 “양국 사이에는 중요한 경제관계가 있으며, 미국 경제와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이행으로 상당한 혜택을 얻고 있다.”고 밝혀, FTA 이행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경제관계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 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안보분야에서 “분명히 북한의 위협, 그리고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견고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펜타곤 찾은 차대통령, 16분간 의장대 공식사열…美 “최고예우”(10/16, 연합뉴스)
 -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찾았음.
 - 우리나라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이번 방문은 박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중국을 방문해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참관했던 것과 대비되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펜타곤 의장대의 ‘공식의장 행사(Full Honor Parade)’에 참석했고, 이번 펜타곤의 공식 의장행사는 미국측이 동맹국 정상인 박 대통령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함. 박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과 만난 형식인 로프라인 미팅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실시한 형식으로, 대통령이 일렬로 늘어선 장병들 앞을 지나가며 격려하는 행사를 말하는데, 펜타곤이 로프라인 미팅 형식의 장병 격려 행사를 타국 정상에게 허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전하였음.

- **朴대통령, 바이든 관저서 오찬…아시아 정상중 처음(10/16,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초청으로 부통령 관저(Naval Observatory)에서 오찬 협의를 가졌음.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부통령이 관저로 아시아 정상중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한미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힘.
 - 특히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북한의 도발 억지 및 비핵화 등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두 사람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증진,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음.

- **美 해군총장, 北 위협 대응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필요(10/16, 연합뉴스)**
 -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6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리처드슨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과 과거사를 비롯한 외교 문제로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유형의 3국 협력(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보다 나은 대북 억제 태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한일 양국의 과거사가 “복잡한 문제”라고 시인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한미일 3국 협력으로 훨씬 반응적이고 억제적인 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함.

- **한미정상회담 성과, ① 북한만 다룬 공동성명 첫 채택(10/17,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점을 재확인함.
 - 특히 두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직후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정상 차원의 첫 공동문서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현함.
 -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 추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함.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미정상회담 성과, ② 고위급 협의…중이어 美와 통일외교(10/17,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함.
 -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은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 국면에서 다시 대화 국면으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 해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DMZ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도출된 남북 8·28 합의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미정상회담 성과, ③ ‘중경사론’ 불식…동맹의 진화(10/17, 연합뉴스)
 -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함.
 -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면서 미국 조야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것이었던 것 만큼 양국 정상이 동맹을 더욱 진화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이번 박 대통령 방미에서의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됨.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미국 내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오해를 일축함.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아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언급함.

- 한미정상회담 성과, ④ 한미일 협력확대·한중일 협력강화(10/17,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국·미국·일본, 한국·미국·중국, 한국·중국·일본 등 소규모 다자 협력 강화도 추진키로 함.
 - 북핵·북한 문제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영토 문제 등의 이유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한미 양국이 소(小)다자 협력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 특히 양국이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각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에 더해 한일 관계 차원에서도 합의가 있음.

- 한미정상회담 성과, ⑤ TPP참여 급물살·우주개발협력(10/17,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임.
 -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도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한미 양국이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갔음.
 - 한편, 이와 별도로 양국 대통령은 우주개발 등 뉴프런티어(New frontier)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양국은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히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차대통령·오바마, 백악관 나란히 산책하며 ‘우의’ 다져(10/18,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서 진행된 4번째 정상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 전후에 백악관 경내를 함께 거닐었다고 청와대가 18일 전함.
 -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오찬회담 이후 기자회견장까지, (또) 기자회견 이후 백악관 경내를 함께 거닐면서 친분을 더욱 두텁게 쌓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고 언급함.
 - 또한, 주 수석은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두 분간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북한, 북핵 문제 비롯해 양국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 더욱 솔직하면서도 심도깊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면서 “북핵문제, 평화통일 문제, 동북아지역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층적 협의 가졌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30분의 (단독) 회담이 1시간 이상 진행됐다.”고 설명함.

- 내년부터 ‘한미 우주협력회의’ 정례화(10/18, 연합뉴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우주협력 협정을 이룬 시일 내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한미 우주협력회의도 내년 상반기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함.
 - 두 나라는 작년 7월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열어 달탐사, 위성, 위성정보 활용 등 우주분야 전반에 걸쳐 공동 연구, 기술개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양국 간에 우주협력 회의가 정례화 되면 관련 분야 기술 이전 등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특히 항우연은 올해 안으로 ‘NASA 태양계 탐사 가상연구소(SSSERVI)’에 가입하기로 해 달, 화성, 지구 근접 전체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 한·중 관계

- 외교부, 中 ‘위안부기록유산 국제공조’ 시사에 “민간 판단사안”(10/13, 연합뉴스)
 - 외교부는 13일 일본군 위안부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중국 측이 관련국과의 공조를 시사 한 것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힘.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쪽(중국)에서 아직 검토 중인 것이라고 한 사안”이라면서 “결정이 돼서 우리 측과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에 대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또 노 대변인은 “우리 측 민간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함.
 - 중국과의 공조 결정 주체로 민간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역사문제에 대해 중국 측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의 외교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野 방중단, 시진핑 단체면담…한반도문제 中 협조 당부(10/15, 연합뉴스)
 - ‘아시아 실크로드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중국 방문단 이

- 15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류홍차이(劉洪才) 부부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한중 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음.
- 주 최고위원은 오찬에서 “한중관계가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지금, 한-중은 전략적 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배석한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이 전함. 주 최고위원은 또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심의를 앞두고 농업분야 등에서 반대가 있지만 보안을 거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힘.
 - 이에 류 부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의 세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평양에 갔다 왔지만 과거보다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가 많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다. 한·일 관계

- 한일방위협력 탄력받나...관함식·국방장관회담 잇달아 예정(10/12,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달 하순 한국을 방문,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한다고 NHK가 최근 보도하였음. 일본 방위성 수장이 방한하는 것은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의 방문 이후 4년 9개월 만임.
 -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의 양자 회담 이래 약 5개월 만에 재회할 두 장관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일본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해 거듭 제안해올 것으로 예상됨.
 - 한일간 군사교류는 2012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가 논의되다 무산된 이후 한동안 얼어붙었음. 양국 현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일 정상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을 만큼 관계가 악화한데 군사 분야도 큰 영향을 받았음. 그러다 최근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요구 속에 일본이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의지를 보이고, 한국 정부도 ‘정상회담이 안 열리더라도 다른 한일 고위급 대화는 정상화한다.’는 기조로 전환하면서 양국간 국방분야 협력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모습으로 보임.
- 日신문, 한일정상회담 11월1일 청와대서 개최 최종 조율 중(10/15, 연합뉴스)
 -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3국 정상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오는 11월 1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함.

-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1일 오전 서울을 방문해 당일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이 한일 정부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오는 31일 방한해 당일 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한·중 양국이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은 보도함.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된 것은 없다.”면서 “여러 가지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조절되면 조율해서 적기 발표하도록 준비가 되고 있다.” 언급함.

■ 국방부, 우리 동의 없는 日 자위대 진입 용인할 수 없다(10/15, 연합뉴스)

-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힘.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필요할 경우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함. 또한,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국익에 미치는 영향 있을 때도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함.
- 한편, 다음 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원칙을 피력할 것인지 묻자 김대변인은 “당연히 우리 입장과 원칙을 일본 측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하였음.

■ 차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때 아베와 회담 가질 수 있어(10/16, 연합뉴스)

-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2주 후에는 3년 반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이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주제의 연설과 연설 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함.

-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그 (한일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그것이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변화 발전해 나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서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된,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짐.

■ 日정부, 위안부 문제 다양한 레벨서 협의하는 게 중요(10/1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의미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레벨(급)에서 협의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한국 측에 지금까지도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힘.
- 스가 장관은 박 대통령 발언이 군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결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이웃이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을수록 정상 간에 흥금을 터놓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나라의 자세”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레벨에서의 협의’를 거론한 스가 장관의 발언은 ‘군위안부 문제는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에 입각한 그의 종전 발언 톤과 뉘앙스가 다른 것으로 보임.

■ 日서 한일 정상회담 기정사실화…아베 ‘군위안부 회피나 돌파냐’(10/17, 연합뉴스)

- 11월 1일 한일 정상회담(서울) 성사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한일간 핵심 현안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음.
-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과 우익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17일자에 나란히 한일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소개함. 두 신문을 포함한 여러 일본 언론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며, 군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의미 있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발언을 전함.
- 이와 관련,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참의원 선거(2016년 7월)를 치르는 내년에는 군위안부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에 아베 총리로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군위안부 문제를 일단락 지을 마지막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땅’ 주장 자료보전 추진(10/18, 연합뉴스)
 - 18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시마네(島根)현과 오키나와(沖縄)현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로 함.
 - 산케이는 시마네현과 오키나와현에 각각 보관된 독도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 가운데 만들어진 지 100년 이상 된 것이나 개인이 소장한 것이 많아 손상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이들 전문가들이 보존 방법을 재검토한다고 전함.
 - 한편, 한국 외교부는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단계적으로 침탈 과정의 일환이며 한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해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美, “인공섬 해역진입” 경고에 中 “군사시설물 설치” 반격(10/14, 연합뉴스)
 - 미국이 남중국해 상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군사 시설물’ 강화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남중국해 갈등이 다시 한 번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음.
 - 1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카터 장관,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마리스 페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하고 나서 연 기자회견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힘. 카터 장관은 특히 “남중국해의 불확실성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미국과 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섬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인공섬 위 설치물들은 ‘민사 수요’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더욱 크다고 언급함. 또 “물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군사시설도 설치할 것이며 이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일 뿐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라고 주장함.

-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문’ 시진핑, 미·중 대등관계 원해(10/15,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잇따라 글로벌 거버넌스(통치 시스템)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구축을 바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 당정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을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함.
 - 이에 대해 중국 컨설팅 기업인 차이나 폴리시의 벤자민 허스코비치 연구원은 시 주석의 비전이 중국과 미국 간 대등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함. 허스코비치 연구원은 “시 주석은 미국이 더는 인권과 사이버보안, 영토분쟁에 대해 훈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자국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할 이른바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세계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음.

- 중국 언론, 남중국해 갈등 미국에 ‘군사적 반격’ 경고(10/15, 연합뉴스)
 -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군사적 반격’을 거론하며 미국을 향해 경고음을 냈음.
 - 이에 미국 측도 국제법상 허용된 어디서든 항행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해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5일자 사설에서 “미국 군함이 난사(南沙)군도 12해리 이내를 침범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해 제압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이에 일본 방문 중인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행사가 도발이 될 수 없다고 반격하였음.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우리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항행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이 의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어떻게 도발로 해석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힘.

- 中, 영유권 갈등 동남아국들에 “남중국해서 연합훈련” 제안(10/16, 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내년에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하자고 제안함.

- 16일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 판에 따르면,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동남 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국방장관 비공식 회담’에서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함께 수호하고 함께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리스크를 관리해나가자”면서 이같이 말함.
- 이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남중국해 연합훈련 제안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반격 행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됨.

바. 미·일 관계

- **日 오키나와지사, 미군기지 승인 취소…아베정권과 갈등격화(10/13, 연합뉴스)**
 - 미군기지 신설에 반대해온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지사가 13일 신설 부지에 대한 매립 승인을 취소함. 이에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 사이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음.
 -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오진 후텐마(普天間) 기지(오키나와현 기노완 시 소재)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오키나와현 나고 시 소재)에 대한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공사 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에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함.
 - 오나가 지사는 현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전 지사 재임 중인 2013년 12월 이뤄진 매립 승인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함. 그는 이어 “앞으로도 헤노코에 새 기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 **日 언론, 오바마, 정상회담 앞둔 한일에 상호 양보 촉구(10/17,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사실과 한일간 역사문제 해결을 촉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소개함.
 - 다수의 일본 언론은 그간 한국의 ‘대 중국 편향론’을 거론하며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이 그것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해왔음. 그랬기에 일본 언론은 대체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다소나마 ‘균형 맞추기’를 한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함.
 -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의 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이 협력하기로 했다.’를 17일자 석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음. 또 “미국이 대(對) 일본 관계 복원을 강하게 요구해서 한국이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일본 외무성 간부), “이웃 정상끼리 회담하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겨우 해소되게 됐다(일본 정부 고관)”는 등 자국 정부 인사들의 평가를 전함.

- 아베,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 탑승…日총리 첫 사례(10/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에 탑승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일본의 현직 총리가 미국 항공모함에 직접 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베 총리가 레이건호에 탑승한 것은 미·일 동맹을 부각하고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대비해 양국이 강하게 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아베 정권은 최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률을 제·개정해 공포했으며, 이것이 미·일 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왔음.

- 미국·일본·인도, 인도양서 8년 만에 연합훈련…중국 견제(10/18, 연합뉴스)
 - 미국·인도·일본이 인도양에서 원자력 항공모함을 동원한 3국 연합 군사 훈련을 8년 만에 재개함.
 - 미군, 인도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합 훈련 ‘말라바르(Malabar)’가 인도양의 벵골만에서 이달 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훈련 현장이 17일 언론에 공개됨.
 -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훈련에 일본 을 포함시키고 인도와 일본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에 위험하다.”면서 “인도는 자국을 반(反) 중국 진영에 포함시키려는 (다른 나라의) 의도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사. 미·러 관계

- 마러 전투기 시리아상공 근접조우…“우발적충돌 방지 각별주의”(10/14, 연합뉴스)
 - 러시아가 최근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공습에 나서면서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근접 조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시리아 상공을 비행하던 연합군 전투기의 시아에 몇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왔다.”면서 “모든 조종사가 상호 식별 후 적절하게 판단해 (사고 없이) 각자의 항로를 비행했다.”고 밝힘. 그는 “이번에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양측 전투기가 상대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한 공간에서 만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과 정보 측면에서 모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후 군사 대화를 중단했으나, 러시아가 최근 시리아 내 IS에 대한 독자적 공습을 시작한 이후 우발적 충돌을 피하고자 대화를 재개하였음.

■ 러 총리, 미, 시리아 IS 격퇴 성과 없어…우리가 관건(10/17,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이 성공적이지 않다며 자국의 별도 개입 당위성을 재차 강조함.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자국 TV방송 ‘베스티’와 인터뷰에서 “시리아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일에서 미국의 성과가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음. 또한, 메드베데프 총리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활동에도 IS는 오히려 확산한다.”면서 “오직 러시아만이 시리아 사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도 전날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국가모임) 정상회의에서 “공습으로 수백 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수백 곳의 지휘소, 무기를 대량 파괴했으며 러시아군은 지금 국제법을 완벽히 준수하고 있다.”며 시리아 사태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음. 러시아가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개입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서방과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는 소재이기 때문임.

■ 오바마, 이란-러시아식 시리아해법 작동 않을 것(10/17, 연합뉴스)

- 시리아 사태에 이란과 러시아가 개입한 데 대해 이들 두 나라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장담한 것으로 전해짐.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국 기자로부터 중동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들(이란)은 지난 5년간 했던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점은 그들의 해법이 가진 기본 전제와 이론이 작동하지 않아 왔고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답했음.
- 또한 “이제 러시아인들이 (시리아에) 들어오고 있고, 이란은 더 많은 사람을 보내겠지만, 대다수 시리아인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도우려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아. 중·일 관계

- 일본 간첩 잇단 체포…中日갈등 부추길 또 다른 ‘뜨거운 감자’(10/12,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간 스파이 경쟁이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이 모두 4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중일 양국 갈등을 부추길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음.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올해 초 일본에서 중국인 1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이 최근 일본의 대(對) 중국 첩보수집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 함. 일본의 우경화에 따라 중국을 적국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면서 일본의 대중 스파이 활동이 과거보다 훨씬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 일본 산케이신문을 인용해 올해 초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62세의 중국인 무역업체 사장이 중국군 정보기관과 정기적으로 접촉을 갖고 방산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절취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함.
 - 일본의 중국경제 전문가 쓰가미 도시야(津上俊哉)는 11일 트위터에 “최근의 중국의 잇따른 일본 스파이 체포는 일본 경찰이 중국인 간첩 용의자를 체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으며, 일본 우익매체인 ‘보수속보’는 최근 “일본에서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 8만 명이 모두 중국 간첩”이라는 주장으로 일본 보수우익의 결집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해짐.
- 中, 난징대학살 세계기록유산 기념비 세우기로(10/15, 연합뉴스)
 - 중국이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표식비를 세우기로 함. 장쑤(江蘇)성 난징에 있는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기념관은 관련 기록물 보관지이자 당시 대학살 현장으로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정문 입구의 광장 중앙에 세계기록유산 표식비를 세울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 세계기록유산 표식비는 중국이 난징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12월 13일 국가추모일 전날 저녁에 공개될 예정으로, 현재 광장에 있는 ‘난징대학살 희생자 합장지’ 표식비와 나란히 세워지게 될 것으로 관측됨.
 - 주청산(朱成山)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기념관 관장은 “일본군에 의한 난징 대학살 사건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사에 큰 교훈을 남긴 사건으로 세계 평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다.”며 표식비 건립에 나선 이유를 설명함. 주 관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일본의 억지스런 항의는 일본이 잘못된 역사 인식의 길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오점을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말함.

- ‘무릎사죄’ 하토야마, 日정부 ‘유네스코 비판’에도 쓴 소리(10/15, 연합뉴스)
 - 지난 8월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에게 행해진 가혹행위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일본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또다시 쓴 소리를 함.
 - 15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가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일본은 유네스코 결정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음.
 - 또 “(이번 결정은) 중국의 압력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일본군이 전쟁을 일으켜 많은 중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면서 설령 단 한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라고 강조하였음.
- 日, ‘비판 의식했다’…유네스코 분담금 중단 ‘신중론’으로 선화(10/15, 연합뉴스)
 -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발하며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중단 등을 검토해온 일본 정부가 비판을 의식한 듯 ‘신중론’으로 선회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副)장관은 14일 BS후지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유네스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 정지 또는 삭감 방안에 대해 “일본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각출금을 빼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같은 날 “(유네스코 출연금 등의) 지급 정지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지만 (세계 기록유산 심사의) 제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밝힘.
- 아베, 야스쿠니 가을제사 때 참배 안하고 공물 바칠 것(10/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17~20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가을 제사(추계 예대제)때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바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가을제사 기간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보낼 것으로 알려짐.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향후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분석함.

- 한편,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1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총리는 그 후 봄·가을 제사, 종전기념일(8월 15일) 등 야스쿠니의 주요 절기 때 공물 또는 공물료를 바쳤지만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음.

- 아베, “난징문서 세계유산 신청 유감”…양제츠, “역사 인정해야”(10/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양제츠(楊潔篪兼대신虎들어간廉) 중국 국무위원(부총리급)이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음.
 - 아베 총리는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양 국무위원과 회동한 자리에서 중국 측이 난징 대학살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아베 총리는 또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일중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설이 있다.”고 맞받아쳤다고 전해짐.
- 日, 시진핑에 내년 봄 방일 초청…“도쿄 벚꽃 보러 오라”(10/1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립여당 당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봄 일본을 방문하라고 초청한 것으로 전해짐.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 1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 아베 총리 친서를 전달하면서 내년 봄 일본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야마구치 대표는 시 주석에게 “도쿄의 벚꽃을 보러 오시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야마구치 대표는 전함.
 - 한편, 야마구치 대표는 베이징에서 아시아 각국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방중 했으며, 각국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시 주석을 만났음.

- 中, 日침략전쟁 상징물 ‘팔굉일우 석탑’ 석재반환 요구(10/16, 연합뉴스)
 - 난징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성공한 중국이 이번에는 일본에 중일전쟁시기 약탈해간 것으로 알려진 고석(古石)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16일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참고소식(參考消息)이 싱가포르 연합조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중일전쟁 시기 난징(南京)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약탈한 고석들을 이용해 ‘팔굉일우(八紘一宇) 석탑’을 조성했음.
 - 지금은 ‘평화의 탑’으로 불리고 있는 이 탑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고석들은 중국, 대만 등에서 ‘기증형식’을 빌려 약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고석은 반출지도 명확히 새겨져 있다고 전해짐.
 - 연합조보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 우셴빈(吳先斌) 중국난징항일박물관 관장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이 석탑을 둘러본 뒤 같은 달 27일 미야자키현 측에 약탈해간 고석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함.

- 일본 각료 2명, ‘A급 전범합사’ 야스쿠니신사 참배(10/18, 연합뉴스)
 - 18일 야스쿠니신사에 따르면 이와키 미쓰히데(岩城光英)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이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이틀째인 이날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를 각각 방문해 참배함.
 - 이와키 법상은 이날 7일 개각에서 입각했으며 각료 신분으로는 이번에 처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짐. 그는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사비로 냈으며 “국무대신 이와키 미쓰히데”라고 이름을 남겼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그는 참배에 관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영혼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올렸다. 외교 문제로 삼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함. 한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중의원과 참의원들은 20일까지인 이번 제사 기간에 집단으로 참배할 예정으로 전해짐.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쿠릴 영유권 논의 교착...푸틴 연내 방일 무산될 듯(10/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을 보여 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이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양국 간 현안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논의에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연말까지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안에서 강해졌다고 교도는 전함.
 - 일본 정부 안에서 푸틴 방일 연기론이 급부상한 계기는 지난 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외무 차관급 협의였음. 당시 쿠릴 4개섬의 역사적 경위와 법적 지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전해지며 러시아 정부가 ‘러일 당국 간의 영토 협상을 공식적인 장(場)에서 명언(明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보도함.

- ‘난징 등재’ 비판한 日, 같은 논리로 러시아에 공세 허용(10/16, 연합뉴스)
 - 중국이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데 반발한 일본이 이번엔 공세를 받는 입장이 되었음.
 - 러시아 정부 산하 유네스코 위원회의 그리고리 오르조니키제 사무총장은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 관련 자료를 최근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시킨데 대해 “정치 문제를 유네스코에 들고 들어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함.
 - 오르조니키제 사무총장은 또 “일본이야말로 (시베리아 억류자 자료를) 등재 신청함으로써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하며, 그는 난징대학살 자료의 등재에 대해서도 중국 국민의 비극은 이해한다고 전제했지만 “같은 일이 많은 나라에서 있는 만큼 문제는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부족식량 중 30만 톤 미확보”(10/1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13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5년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 35개국에 포함했음.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 4월에서 7월 사이의 극심한 가뭄과 7-8월의 홍수로 2015년 북한 주민의 주식인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60만 톤이나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북한 주민 1천 600만 명이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음.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약 42만 1천 톤에 이르지만, 현재 북한이 확보한 식량은 14만 2천여 톤에 불과해서 필요량의 약 67%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음.
 - 일 년 전과 비교하면 식량부족분은 더 늘었지만 확보한 양은 줄었음.
 - 지난해 식량농업기구의 3분기 작황보고서는 북한의 2014년 식량부족량을 약 30만 톤으로 전망했지만 올해는 42만 1천 톤으로 부족한 식량규모가 12만 1천 톤 더 늘었음.
 - 반면, 지난해 북한 당국이 외부에서 들여온 식량은 약 34만 톤 규모였지만 올해는 수입 약 12만 6천 500톤에 국제사회 지원 1만 5천400여 톤을 포함해 총 14만 2천 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음.
 - 결국 약 30만 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올해 초 가뭄과 여름의 홍수 등 자연환경과 나쁜 경제 상황, 그리고 농기계와 비료 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음.
 -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의 식량체계가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작물 재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 FAO “북 도시농촌 빈곤격차 크다”(10/14, 자유아시아방송)
 - 식량농업기구가 14일 공개한 2015년 세계식량농업백서(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는 북한 농촌 어린이 4명 중 한 명꼴로 영양부족상태인

저체중이라며 동아시아에서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했음.

-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도시와 농촌 사이 빈곤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음.
- 북한의 농촌 지역 어린이 4명 중 한 명 꼴인 27%가 저체중인 반면 도시에 사는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13%로 7.6명에 한 명 꼴임.
- 식량농업기구는 동아시아의 식량 부족 상태인 국가로 북한, 중국, 몽골을 꼽았는데 북한의 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평가했음.
- 중국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도시 1.3%, 농촌 4.4%이며 몽골도 도시 2.8% 농촌 7.3%임.
- 북한의 농촌 어린이 저체중 비율은 중국보다 500% 높고 몽골보다도 약 260% 높음.
- 한편, 식량농업기구의 식량농업백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을 300만여 명으로 추산하면서 여성이 절반에 가까운 46.5%라고 소개했음.
- 농민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지만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 노동력 비율은 21%로 평가했음.
- 전체 인구 대비 농민 수 비율은 지난 23년간 약 15% 줄었음.
- 1990년 전체 북한 인구의 38%인 세 명 중 한 명꼴로 농민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전체 인구의 21%로 다섯 명의 한 명꼴로 줄었음.

■ 미 보고서 '북한 기아 문제 전세계 26번째로 심각'(10/14, 미국의소리)

- 북한이 전 세계 104개 국가 가운데 26번째로 기아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꼽혔음.
- 미국 워싱턴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 IFPRI'가 12일 발표한 '2015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50점 만점에 28.8을 기록해 식량난이 '심각한' 국가로 분류됐음.
- 0점은 기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50점은 국민 모두가 굶주리는 '매우 위험한(extremely alarming)' 수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식량난이 심각한 것을 의미함.
- 지난 1990년 30.1점을 기록했던 북한의 기아지수는 1995년에 35.9으로 올라간 데 이어 2000년에는 40.4를 기록했음.
- 당시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로, 수십 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기아 지수는 이후 2005년 32.4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2015년 28.8로

추가 하락했음.

-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국민의 영양상태, 5살 미만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과 사망률을 기준으로 기아지수를 산정하고 있음.
- 실제로, 5세 미만 어린이 저체중 비율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12.2% 에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4%로 크게 떨어졌음.
- 5세 미만 발육부진 어린이 비율도 1998년부터 2002년사이 51%에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27.9 %로 낮아졌음.
- 또한,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율도 2000년 6%에서 2013년 2.7%로 줄었음.
- 국제사회 지원이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설명임.
- 이처럼 북한의 기아 문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주민 세명 가운데 한명은 여전히 단백질과 비타민 등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34%가 영양부족을 겪었음.

■ 미국무부 보고서…“북한 종교자유 없고 사형·고문 자행”(10/15,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음.
- 북한은 2001년 이후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임.
- 올해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항목에 관해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거의 유사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북한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최악의 인권탄압국임을 부각시켰음.
- 또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보고서에 들어갔던 ‘종교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문구가 삭제돼 종교 자유가 원천적으로 박탈돼 있음을 강조했다.
-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동시에 종교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질서를 위해 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면서 “북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단체는 계속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신고될까 두려워 자신들의 활동을 이웃과 직장 동료 등에게도 철저히 숨긴다”면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사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북, 가족탈북 방조자 처형 경고”(10/15, 자유아시아방송)

- 노동당창건 기념일 직후 북한이 국경연선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가족동반 탈북을 방조한 자들을 처형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음.
- 이 같은 강연은 이미 국경경비대원들에게 진행된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 15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가족들과 함께 도강(탈북)하는 자들을 도와준 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처단하고 부모와 가족들은 농촌오지로 추방한다는 내용의 강연이 14일 저녁 인민반회의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했음.
- 북한은 10월 초에 국경경비대 군인들을 향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음.
- 지금까지 북한은 가족동반 탈북을 방조한 군인들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7년 이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데 그쳤다고 그는 설명했다.
- 또 가족동반 탈북을 도와 준 본인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벌을 했을 뿐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강연에서 본인은 처단하고 가족들과 부모들은 농촌으로 추방하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처벌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가족단위의 불법월경(탈북)을 도와준 자들을 연대적 책임을 지워 엄벌하겠다는 중앙의 방침은 최근까지 있는 대사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같은 날 언급했음.
- 북한은 올해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으로 교화소(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 대한 대사면을 결정하고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5년 이하의 교화(교도)형에 처해졌던 주민들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대사면을 받고 석방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국으로 탈북을 시도했던 주민들, 탈북을 방조해 준 죄로 교화형에 처해졌던 국경경비대 군인들과

밀수꾼들도 많이 포함되어있어 북한 사법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에 반발...“초강경대응”(10/18,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유엔의 북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재추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조종하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다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획책하면서 초안 작성을 위한 협상 높음을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유엔 무대에서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모략 책동”이라며 “적대 세력의 무분별한 인권 대결 광기를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눌러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 대변인은 또 “우리는 최근 EU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EU는 합의된 전권대표 방문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거짓말투성이 보고서를 들고다니며 결의안 채택 높음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북한은 “인권유린 장본인들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남을 걸고드는 비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EU와 일본은 부당한 결의안 상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우고 서방의 인권문제부터 취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앞서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이 최근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음.

2. 북한인권

- 노르웨이 설치미술전 북 인권 소개(10/13, 자유아시아방송)
 - 노르웨이의 설치미술가 리스 비온 리너트(Lise Bjorne Linnert)씨가 수도

오슬로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모스의 한 교회에서 ‘잔혹성’(Cruelty Has a Human Heart)을 주제로 한 글귀 80여 점을 전시하고 있음.

- 리너트 씨는 작품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탈북 여성 박지현 씨에게 북한 인권에 관한 글을 한 점 부탁했다고 밝혔음.
- 리너트 씨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노르웨이의 한 노인이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작품에 담았다고 전했다.
- 70대 후반의 잉그리드 콜루드(Ingrid Kolrud) 할머니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박 씨의 글귀를 수 놓으면서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임.
- 박 씨는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고 그 안에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유린되고 있다는 설명임.
- 리너트 씨는 이번 전시회가 관람객들이 박 씨의 글을 수놓은 작품을 보고 북한 인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음.

■ 황총리 “北인권기록보존소 필요…조사기록 보관중”(10/14, 연합뉴스)

-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우리도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일전 서독이 동독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한 사례가 동독주민의 인권보호에 도움을 줬다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영향을 크게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현재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한 기관에서 지금까지 조사 가능한 부분은 조사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음.
- 남북교류협력과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음.

■ 유엔 ‘北인권 최고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10/14, 연합뉴스)

-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음.

-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지난 주말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음.
 -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음.
- 미 미네소타대서 북 인권 토론회 열려(10/1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미네소타에서는 오는 19일 중국에 탈북자 복송 저지를 촉구하고, 탈북자들이 제 3국에서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움, 즉 토론회가 열릴 예정임.
 - 미네소타 대학교의 험프리 공공정책 학과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토론회는 미네소타에 위치한 비정부기구 ‘Freedom for North Korean Refugees’ (‘탈북자에게 자유를’)가 추진하고 있으며, 키이스 엘리슨 미국 미네소타주 하원의원, 산드라 패퍼스 상원의원, 잭 랜들러 국제앰네스티 전 대표 등이 참가할 예정임.
 - 이 밖에도,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한국 TV 쇼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이상훈 프로듀서, 탈북자 주찬양 씨도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200명 정도의 북한 문제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Freedom for North Korean Refugees’의 현 김 대표는 미국 53개 주 중 미네소타 주는 소말리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탈북자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그는 이어 아직 미국에는 아직 북한과 탈북자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강조했다.
 -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 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최소한’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은 “유엔이 그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채택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통상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실제 ICC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사실관계나 혐의에 따라 책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이 소식통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될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확정되기까지 관심·관련국의 의사개진으로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책임자의 ICC 회부 외에도 ▲책임자 처벌 ▲납치·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임.
- 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큼.
- 아울러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안보리가 조속히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됨.
- 유엔은 지난해 12월 18일 총회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음.
- 이어 유엔 안보리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음.
- 지난해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식 안건으로 올린 상황에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재추진함에 따라 북한도 적잖은 압박을 느끼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ICC 회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3. 탈북자

- LA단체들 “미, 탈북난민에 관심을”(10/12, 자유아시아방송)
 -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아 망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3국에서 위태로운 탈북자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미국의 시리아 난민 수용 확대를 놓고 탈북자들도 보다 빠르게 미국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임.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탈북자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손인식 목사는 제안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음.
 - 하지만 탈북자 난민과 관련한 정작 큰 문제는 중국이라는 지적임.
 - 중국은 탈북자들을 수용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송하고 있는 중국이 변화해야 탈북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분석임.
 -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집경국인 중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임.
 - 미국이 탈북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것 보다 중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임.
 - 탈북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단체들은 시리아 난민사태와 함께 전 세계가 북한의 난민사태에도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지적임.
 - 유엔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이와 관련해 중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변화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임.
 -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들은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탈북자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차원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미 탈북자 정착지 1위는 켄터키 주”(10/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이 12일 입수한 미국 국무부 탈북 난민 첫 정착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마감된 2014 회계연도에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15명 중 가장 많은 5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정착했음.
 - 다음으로 많이 정착한 곳은 세 명의 탈북자가 동지를 틈 유타 주임.
 - 또한 콜로라도 주, 일리노이 주, 그리고 켄터키 주에 각각 두 명씩 터를 잡았음.

-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중 나머지 한 명은 남부 조지아 주에 정착했음.
- 한편, 미국 뉴욕의 언론매체인 VICE는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미국에 입국한 186명의 탈북자가 18개 주에 분포해 정착했다고 최근 보도했음.
-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그 중 가장 많은 26명이 켄터키 주에 정착했고, 이어 25명의 탈북자가 터를 잡은 캘리포니아 주, 19명이 정착한 뉴욕 주가 3위를 기록했음.
- 이어 4위는 콜로라도 주(17명), 아리조나 주(15명)와 버지니아 주(15명)가 공동 5위, 유타 주(13명)가 7위, 일리노이 주(12명)가 8위 등임.
- 나머지 탈북자들은 위싱턴주, 아이다호 주, 텍사스 주, 인디애나 주, 테네시 주, 조지아 주, 플로리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메릴랜드 주와 매사츄세츠 주에 10명 미만씩 골고루 분포됐음.

4. 이산가족

- 재미 이산가족상봉 연방 결의안 추진(10/15, 중앙일보)
 - 연방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이산가족상봉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음.
 - 법안을 상정한 찰스 랭글(민주.1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4일 플러싱타운홀에서 뉴욕한인회(김민선 회장 측)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단체들과 결의안 통과 촉구 쉼터 행사를 열고 한인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음.
 - 랭글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상정한 이산가족상봉 결의안(H.R.40)은 미국 내에 있는 10만여 명의 재미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연방 차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 한국전쟁 참전군인인 랭글 의원은 “60년간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한인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어떻게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놓고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결의안 상정 배경을 밝혔음.
 - 랭글 의원은 지난해 2월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을 처음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엔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음.
 - 이와는 별도로 랭글 의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 7월 27일

한국전종전선언 결의안을 상정했음.

- 이 결의안(H.R.384)은 “한국전쟁은 전 세계에서 최장 전쟁으로 기록됐다”며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등 20여 국가가 참전해 수십만 명의 군인 사상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하거나 숨졌다”고 전제하고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모든 한국 국민은 평화를 원하고 있다. 현재 휴전 상태인 전쟁을 공식으로 종료하자”는 내용임.

■ 미 의원, DMZ서 교포 이산상봉도 촉구(10/16,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일리노이 주 로버트 돌드 연방 하원위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미국의 이산가족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돌드 의원은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상봉행사가 정례화 되어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이산가족도 부모와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음.
- 돌드 의원은 북한 땅이 육안으로도 직접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군사분계선 건너편에 살고 있을 가족들과 통화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와 자식들의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절망적인 상황에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이번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한 협상 대표들이 재미이산가족들을 가족상봉행사에 포함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줄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음.
- 올해 초 의회에서 열린 이산가족 관련 행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났던 돌드 의원은 가족을 다시 만나는 문제를 정치적 거래가 아닌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건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미국 하원에 이산가족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한편, 미국 하원에 이산가족상봉결의안을 제출했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지난 14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미국 거주 한국 동포에게도 북한 이산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랭글 의원과 돌드

의원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이 사무총장은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한인이 수 백 명 수준이라면서 북한에 직계가족을 둔 한인 이산가족이 2000년대 초반까지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지만, 혈육 상봉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은 이산가족이 시간이 갈수록 늘면서 현재는 1천 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이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북한에 있는 직계가족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의회와 정부 그리고 적십자에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과도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CFK, 대북지원 20주년 기념행사(10/15, 자유아시아방송)
 - 대북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오는 18일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블랙 마운틴 본부 건물에서 대북지원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 이 단체의 관계자는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시작한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과 의료 지원이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면서 미국 전역의 후원자들을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연다고 말했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연료와 식량을 지원했던 2008년 3천100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참여한 5개 민간 구호단체 중 하나임.
 - 월드 비전, 머시코어, 사마리탄즈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 그리스도인 벅들’ 등 미국의 5개 비정부 구호단체들은 북한 전역에서 어려운 형편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분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음.
- 이후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은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집중하면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평양에 완공한 결핵 연수원에서 북한 의료진과 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 이밖에 북한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을 신설하는 사업도 대북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8. 북한동향

-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및 국회의 ‘북한 인권법’ 논의 및 ‘작계 5015’ 수립·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등 거론하며 ‘反北 동족대결소동’이라고 비난(10.13, 평양방송/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동족대결책동·북침전쟁에 불을 달라는 호전적 망동 등)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